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인터뷰

“제보 조작 반성…재창당 수준 혁신”

지난해 4월 총선에서 호남의 지지를 근간으로 탄생한 국민의당에 정치적 시련이 이어지고 있다. 대선 패배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까지 터지면서 여론이 극도로 악화, 정치적 생존 여부마저 위협받고 있다. 광주일보에는 13일 오전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인 박주선 국회의장의 장을 만나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과 향후 진로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결국 구속됐다.

▲국민께 한없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당이 개입한 범죄가 아니다. 이유미 당원의 과도한 공명심이 빚어낸 범죄다. 이 전 최고위원의 검증 미비에 대한 미필적 고의 부분은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당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불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것인가.

▲처절한 반성과 치열한 시스템 혁신으로 재창당 수준으로 거듭나겠다. 제3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

-너무 수사적인 해법 아닌가.

▲그렇다고 의원들이 모두 사퇴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극복, 호남이 만들어 준 정당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겠다.

-조직적 개입이 있다면 당을 해체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안에 당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 이 전 최고위원도 대선 당시에는 지도부 인사자 아닌 선대위의 수많은 위원장 가운데 한 명이었다. 개인적인 공명심과 미비한 검증 시스템이 빚은 참사다. 국민의당이 그렇게 파렴치한 당이 아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미에 민주당 대표 등 여론의 압박이 있었다고 보는가.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 비공식적으로 검찰 쪽에서 이유미 단독 범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이후, 기류가 바뀌었고 결국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치검찰 1호 사건이다.

-문준용씨 취업 특혜 특검은 명분이 약하지 않나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 국회 환노위에서 먼저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유미 사건이 일단락 되는대로 특검을 해야 한다. 이유미 사건과 동시 특검도 할 수 있다. 대통령 아들이 관련된 건인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다. 특검이 모든 사안을 깨



당원 공명심이 빚은 범죄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현정부 첫 ‘정치검찰’ 1호

문씨 취업 특혜의혹 특검

총리 인준 등 협치 적극적

민주당과 통합 절대 없어

내년 선거 여당 패권 심판

호남 미래위해 기회 쥐야

못하게 정리할 수 있다.

-당이 위기다. 해법이 있는지.

▲뾰족한 방법은 없다. 혁신과 민생을 화두로 민생과 함께 갈 수 밖에 없다. 당 분간 고난의 행군은 불가피하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피와 땀과 눈물로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조통과 비난도 달게 들겠다. 하지만 민심이 평가할 것이고 국민의당은 다시 재기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참패론이 거론되고 있다.

▲모두들 참패할 것이라고 하는데 단견이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국

민의당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기필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적어도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승리한다. 여당의 오만과 패권을 민심이 심판할 것이다.

-민주당과의 통합론도 제기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과의 통합은 국민의당을 통해 다당제를 구축한 국민과 호남 민심을 배신하는 것이다.

-국민의당 재기 근거는

▲다당제를 통한 협치 구도는 국민이 만들어졌다. 쉽게 깨지지 않는다. 지난 대선을 통해 독점 구도가 아닌 경쟁 구도가 호남의 미래를 이끈다는 것을 이미 호남 민심이 체험했다. 지방선거는 대선과는 다르다 정치적 감각이 높은 호남 민심이 경쟁 구도를 깨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의당도 사측생의 각오로 지방선거를 준비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두 달을 평가한다면.

▲빈 수레만 요란했다. 준비되지 않은 정권이다. 그동안 민생의 삶에 와 닿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 없다. 북 핵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외교는 표류하고 있다. 특히, 사드 문제로 대중 관계는 오히려 악화됐다. 미세먼지, 탈 원전, 비정규직, 최저 임금 등의 사안도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추진하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특히, 여론을 등에 업고 법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국정 운영에 나서고 있는 부분은 우려스럽다.

-시대적 요구인 협치가 실종됐다.

▲국민의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그동안 사안별로 문재인 정부와 협치에 적극 나섰다. 이낙연 총리 인준과 김상곤 부총리 청문회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협치의 의지가 전혀 없다. 일방적 협조와 굴종만을 강요하고 있다. 40% 지지율로 창출된 정부가 마치 400% 지지율을 얻은 것처럼 취해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정말 걱정된다.

-호남 민심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호남과 국민의당은 순망치한(인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관계다.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호남정치는 소멸의 수순을 밟게 된다. 다시 파편 세력에 출세는 처지가 된다. 호남 정치의 단순한 이익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다당제 구도가 정립돼야 한다. 최근 여러 가지로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دل 낮아 있다. 하지만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민의당에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호남마저 국민의당을 버리지는 말아달라고 호소드린다. 처절한 혁신과 민생 우선으로 응답하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중국문화원 광주분원 유치 3년만에 백지화

1국가 1문화원·사드 여파

호남대 차이나센터로 대체

중국문화원 광주분원 유치 프로젝트가 3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중국의 '한 국가에 한 문화원만 둔다는 원칙'에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까지 겹쳐 유치가 더욱 힘들어졌다. 대신, 광주시는 '차이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6기 윤장현 광주시장 취임 이후인 2014년 8월, 중국 문화부장관에게 중국문화원 분원 설치를 제의한 데 이어 9월에 분원 유치 방침을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3월에

광주분원 유치 문제를 국제교류담당관실과 관광진흥과가 협업해 추진토록 했다. 문화전당 소재지인 광주 동구청도 수년째 중국문화원 분원 유치를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1국가 1문화원 원칙'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중국 외교부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서울 종로구 주한중국문화원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추가 설치하는 어렵다는 게 부동의 원칙이었다.

여기에 사드 배치 문제로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시는 사직도서관에 마련할 예정이었던 차이나스퀘어가 33㎡로 협소해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장소를 호남대 공자학원으로 옮기고 공간도 330㎡로 10배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

산 1억5000만원도 1차 추정 등을 통해 확보했다.

이 곳에서 한국인들에게는 중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어, 태극권, 서예, 전통요리, 전통악기 교육, 비즈니스 컨설팅, 무역아카데미 등을 제공하고 중국인들에게는 한국을 소개하고 관광안내를 위한 콜센터 기능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운영 주체는 광주시고, 전용공간 제공과 인력 지원은 호남대에서, 중국 관련 자료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은 중국 총영사관에서 각각 맡기로 했다.

한편 광주에는 현재 중국계 6793명, 한국계(조선족 등) 3838명 등 1만여명의 중국 국적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청년 3명 중 1명 ‘빚더미’

市 500명 설문조사

빚 대물림도 심각

광주지역 청년 3명 중 1명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9명은 생활고를 경험하고 있으며 4명 중 1명은 생활비 이외에 여윌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청년(만 19~34세) 500명을 대상으로 청년부채 실태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164명(32.8%)이 빚을 지고 있다. 평균 대출잔액은 2494만원, 대학 재학생(19~24세)은 908

만원이다.

대출목적으로 주거비 마련이 33.5%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비(32.3%), 생활비(27.4%), 가족의 요청(15.2%), 빚내서 빚 변제(14.6%) 순이다.

10명 중 3명은 가족이나 돌려막기를 위해 대출을 받은 셈이다. 특히 19~24세 응답자 중 24%는 가족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답해 '빚의 대물림'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혼과 의료비, 창업을 위한 대출은 3.7%와 3%에 불과했다.

대출자 17.7%가 연체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본인 외에 가구원의 금융채무 불이행 경험 비율은 23.8%로 높아졌다.

대출 보유나 채무 불이행 경험자는 문화생활(57.0%), 인간관계(28.1%), 호도(27.0%), 최저생활과 미래의 희망(24.7%), 결혼(18.0%), 출산(2.8%) 등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11.1%만이 생활비 부족을 걱정하지 않았으며 절반에 가까운 45.6%는 소비를 줄여 생활비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500명의 평균 저축액은 784만원이며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2명 중 1명꼴인 45.2%에 달했다. 10명 중 1명(11.8%)은 아예 저축이 없다고 답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6조원대 전남도 금고 유치 경쟁 점화

9월 공고·11월 지정 계획

농협 1금고 지킬지 주목

6조원대 전남도금고를 관리할 금융기관들의 유치경쟁이 사실상 점화됐다. 올해말로 3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를 상대로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9월 금고 지정을 공고하고 10월 중 제안서를 접수, 11월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계약 기간이 연발 만료되는데 따른 절차다.

현재 1금고는 NH농협은행이, 2금고는 광주은행이 맡고 있다.

1금고는 2014년 금고 지정 당시 전남도 전체 예산 6조1309억원 중 5조3606억원(일반회계)을, 2금고는 7703억원(특별회

계 및 기금)을 맡았다. 당시 농협은행과 광주은행 외 응모기관은 없었다.

농협은행은 2001년부터 출금 1금고를 지켜와 이번에도 관리를 연장할지 주목된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금고 운용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전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중이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금고 선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례 개정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은 자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와 접촉하는 등 사실상 금고 유치전이 시작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월어머니집 관장 초청

윤장현 시장, 시민과 대화

윤장현 광주시장은 13일 광주시청에서 오월어머니집 노영숙 관장을 초청해 제21회 '시민의 목소리 청에 듣는 날'을 진행했다. 이날은 오월어머니집 노영숙 관장이 '1980년 5월과 오월어머니의 이야기'를 주제로 윤 시장과 면담을 했다.

노영숙 관장은 "오월어머니집은 5·18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자식과 남편, 형제자매를 희생당한 여성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모임이다"며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이유로 5·18의 진실을 왜곡되지 않게 후세에 알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영숙 관장은 "불의에 항거한 광주 시민과 수많은 국내외 양심인사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5·18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고, 성공한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

2017년

필리핀 주니어 체험

영어 캠프

모집 안내

캠프기간

2017년 7월 30일(일) ~ 8월 26일(토)

모집인원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캠프장소

마닐라 알라방 리조트 전용 동

• 24시간 상주 현지 담임 선생님

• 맞춤형 멘토엔 수업, 생활 영어 체험, 현장 영어 공부

•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 영어 캠프 선생님

• 독특하고 다양한 액티비티

상담 문의

070.8286.8726

epoweredu

블로그 : http://blog.daum.net/e.power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630-중-83291호

첨단우리병원

부분마취! 최소절개! 단기입원!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허리와 목 질환의 15년간 임상 경험!

척추, 관절, 골절, 정형외과 수술

대표전화 | 062) 970-6000